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강관실
세계철출판사 대표

1500년경 약 500여 개의 정치 단위들이 존재해 있던 유럽에서는 이 작은 정치체를 통합해 대국을 이루고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은 오히려 절대주의 시대에 국왕의 권력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왕은 재정권을 쥐고 있는 귀족과 부르주아 등 실력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했고, 반대로 그들은 국왕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권절 교수는 그의 저서 '문화로 읽는 세계사'에서 절대주의 체제는 국왕이 절대적인 '척'하는 체제로 그것은 매일 장엄하게 상영된 절대주의

투표 그 이후

라는 국가적 연극이었다고 표현한다. 일본의 행동하는 정치학자 스기타 아쓰시는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원제 '정치적 사고')라는 책을 통해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대표들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연극으로서의 대표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인은 각각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논전을 펼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중략) 정치적 쟁점이 어디에 있고, 대립 축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누구의 의견에 가깝고, 어떤 점이 다른가? 대표들이 펼치는 정치적 극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은 똑같지 않다. 계층과 연령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조건에 처한 사람들도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민'의 존재하고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대표제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상 통일된 확고한 민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스기타는 오히려 전체 민의가 통일되지 못하고 모호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에서서는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논쟁하거나 정당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간다고 말한다. 테러방지법에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필리버스터'를 보며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처럼.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각 정당과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는 속에서 국민들은 쟁점이 무엇이고 대립 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경쟁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정책들은 오랜 시간 거듭 사유하고 실행하며 그것을 밀거름 삼아 나온 것이 아니다. 즉흥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겉데기에 불과한 공약들이 줄속으로 만들어지고, 자유주의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목표는 '집권'으로 둔갑한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투표는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권은 결국 투표한 사람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뿐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것인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인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멈춰 버리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권익은 경제 논리에 묻히는가' 등등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는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선거 후에 공약들이 실행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투표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스기타의 말을 인용해 보자.

"선거나 정당정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정치를 육성하여 정치인들을 포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린다면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백지 위임하게 될 뿐입니다. 정치인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선거 이외에 다른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큰 움직임은 반드시 정치를 바꿉니다." 연극이 끝나고 정적과 어둠만이 흐르고 있을 무대 앞에서, 우리는 정치를 바꿀 큰 움직임을 여전히 생각해 야만 한다.

종교칼럼

요강인가! 양념단지인가!



김관식
증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요강인가! 양념단지인가!

던 것으로 보는 아집(我執)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하나의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도 '고정불변의 그것'으로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법집·상(法執·相)'이라 한다.

그래서 모든 집착심에서 갖가지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것은 이 '아상과 범상'에서 시작된다. 집착심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대상)에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이다. 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보겠다.

거실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곳에 조그만 향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향아리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사 용하던 요강이었다. 이것은 이 집 며느리도 몰랐던 사실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 손자가 그 향아리를 보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엉겁결에 대답하길, "음, 양념을 넣어두는 양념단지란다."

며칠 후 며느리가 양념을 보관할 용기를 찾고 있을 때, 손자가 거실의 향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기가 넣어 두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기겁을 하며 말하길 "이 녀석아, 요강에다 양념을 넣으면 어떡하니"

이튿날 소변을 막 가리기 시작한 손녀가 거실에서 갑자기 소변 볼 곳을 찾자, 할머니는 그 향아리를 가리켰다. 옆에 있

던 손자가 큰일이나 난 것처럼 말했다. "할머니, 양념단지에다 오줌을 누게 하면 어떡해요."

사소한 이야기길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다.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저것은 요강인가, 양념단지 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향아리라고만 해야 할까?

눈앞의 저것은 소변을 보면 요강이지만, 양념을 넣으면 양념단지가 되는 것이다. 흙을 넣고 꽃을 키우면 화분이 되는 것이고, 맑은 물을 붓고 금붕어를 키우면 어항이 될 수 있고, 까치에게는 동지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요강으로만 보고, 손자는 언제 어디서나 양념 단지로만 보기 때문에 논쟁과 갈등은 없 어질 수가 없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칠 때 는 교수이지만, 교수가 지게를 질 때는 지 게꾼 일뿐이다. 교수가 지게질 때 교수가 고 우기는 것은 '아집(我執)' 때문이다. 할머니와 손자는 바로 우리를 자신의 모습 이 아닐까 싶다.

거실에 있는 향아리를 두고 요강이다. "양념단지다. 향아리다. 화분이다" 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는 것은 예니저 소모에 불과하다. 향아리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한데 사람들만 쓸데없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다툼이나 갈등과 분열 또한 이와 같다.

반아집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색은 즉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는 뜻이다.

육신 또한 내 것이라 집착하지만, 병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늙어감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 변해가는 내 모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위 이야기 속의 할머니와 손자는 아마 평생 동안 '요강, 양념단지'로 믿고 살 것이다.

그런 할머니에게 요강은 곧 공(空)이다. 쉽게 말해 "요강은 요강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는 요강에 대한 할머니의 기존 생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할머니의 그것과 별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색즉시공' 이 한마디에 의해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나와 여타분 등에 대해 우리들의 고정관 념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라고" 고집 하는 것은, 마치 컵에 들어가든, 그 어떤 모양의 그릇에 들어가든, 전혀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특정 모양의 물'이 있다는 착각과 같은 것이다.

社說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행 논란이 남긴 교훈

선택 4·13 D-5

호남 총선 현장 방문을 놓고 논란이 컸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는 광주를 찾는다. 국민의당에 최측근이자 지당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선뜻 호남행을 결정하지 못했던 그였기에 시선이 모인다.

문 전 대표는 8일 오전 광주로 와 이른 날 낮에는 전북으로 넘어간다. 호남을 안방으로 삼아 왔던 더민주의 전 대표이지만 행보는 극히 조심스럽다. 소속 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민심을 들어보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 지지층을 호소하는 '위로'와 '사과' '경청'이 주목적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호남이 탄생시켜 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얼마 전까지 더민주의 수장이었던 것의 발걸음은 왜 이따지 저따지 위 바라는 것일까. 많은 사람은 이른바 '반노(反濤)' '반문(反文)' 정서를 꼽는다. 호남인들의 절대 지지도 출범한 참여정 부 때 되레 호남 홀대가 심했고, 실제였

던 문 전 대표가 주역이었다는 음여리가 모두 풀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그를 위시한 친노·친문의 계파정치가 호남에 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한 포용의 정치를 뒤로한 채 패권주의에 안주하다 아권 분열을 불러온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수권 정당으로서 더민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아 왔던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삼는 바람에 현재의 판세가 형성됐다는 풀이는 설득력이 충분하다.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던 호남의 바람과는 전혀 거꾸로 가는 바람에 싸늘해진 민심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그의 고뇌는 작지 않아 보인다. 불과 선거 다섯 전 문 전 대표의 호남행에는 큰 교훈이 깔려 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 호남을 토대로 입지를 다지고도 호남을 외면하는 전철을 밟는다면 역시 문 전 대표와 똑같은 번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주에선 호통치고 대구에선 무릎 꿇고

최근 주요 일간지 1면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지난 6일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이 "공천과정의 불합화음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 것이다. '진박 내려놓기'와 '옥새 투쟁' 등의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싸늘해지면서 오랜 뒷날인 대구·경북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의 '무릎 사죄'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 때문 되면, 그것도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내놓는 이벤트처럼 가식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사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2년 전인 지난 2014년 6월에도 서울역 과정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결의대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 대한 사죄의 큰절을 했다.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공여지책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안면을 싹 바꿨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의 애원을 외면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태연하게 사죄 퍼포먼스를 벌였으니, 선거 때만 무릎을 꿇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전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난 16년간 전북을 석권한 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며 "어려분은 발달도 없나. 전북 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대구에선 무릎 꿇고 전주에선 호통치고, 어떤 게 새누리당의 진정함 모습인지 어안이 병방일 뿐이다.

새누리당과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북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벤트보다는 현실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쉬울 때만 읊소하는 유세로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無等鼓

'자식 살해'는 처참한 범죄지만, 인류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행동 유형이기도 하다. 인류 문화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신화에는 자식 살해 이야기가 여겨지지 담겨 있다. 수많은 세월을 견뎌 오면서 단순화·유형화되어 했지만 대부분의 신화에서 '자식 살해'는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복수, 광포한 신을 달래기 위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의 제거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식에게 경쟁자인 자식을 살해한 사례로는,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크로노스를 들 수 있다. 크로노스는 누이 라이아를 아내로 삼아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등 6명의 자식을 낳는다.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지배권을 빼앗긴다'는 신탁을 받은 크로노스는 태어난 자식을 차례로 먹어 삼켜 버린다.

극히 일부 사례를 들긴 했지만, 수많은 신화와 설화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 배우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식을 살해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의 원녀 '메데이아'다. 그녀는 빼앗긴 황금 양가죽을 되찾으려 아르고호를 타고 온 영웅 '이아손'과 결혼하기 위해 부모·형제까지 배신한다. 하지만 남편이 권력에 눈이 멀어 또 다른 원녀와 결혼을 하자, 이아손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한다.

신화는 아니지만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독일한 아브라함은 명령을 이행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개입해 이삭은 목숨을 건진다.

자식 살해

관계법의 태생적 성격이 그렇다. 다양한 분쟁에 유동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 실효성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판단을 주로 한다. 판정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급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제도가 지난 2007년 1월 26부터 적용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도 설립되어 이제 60여 년의 역사를 걸어왔다. 사건도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근로형태 및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고 관련 내용들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판단결과를 보면 2015년도도 경우 전국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1만1406건이 종결(96.4%)되었고 이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423건이고 그중 66건만이 법원 패소하여 84.4%가 재심을 유지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판단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시장의 복잡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은 개인도 억울하지만 이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공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노동위원회가 함께한다.

기고

부당해고 근로자,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현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부당해고 등을 할 수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경영상의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노동조합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 경영상의 해고가 아닌 이외의 해고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해고 구제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하고, 이에 불복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간을 3개월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첫째 신속·간이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당기간이 경과할 경우 상호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3개월로 한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 즉, 구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도 판단하여야한다.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 즉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이다. 부당해고 등의 판정은 노동문제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변호사, 노동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인과 노사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3인의 공익위원이 판정한다. 해고 등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위원들은 본인들의 다른 직업이 있는 비상임제로 운영한다. 제도적인 발전을 기하고 늘어나는 사건을 고려한다면 상임위원회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서울, 인천, 부산에는 소수의(1~3인) 상임위원이 있기는 하나 이외 지역은 상임위원이 없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필요하고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판단의 기초로 하여 노사 당사자가 출석한 심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 본 후 최종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이에 앞서 상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해관고를 통해서 심문회의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은 법원의 재판과 비교할 때 행정적 성격의 준사법적 합의 제 기관이다. 그 판결을 보면 법원보다 유연한 사회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노동

관계법의 태생적 성격이 그렇다. 다양한 분쟁에 유동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 실효성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판단을 주로 한다. 판정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급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제도가 지난 2007년 1월 26부터 적용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도 설립되어 이제 60여 년의 역사를 걸어왔다. 사건도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근로형태 및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고 관련 내용들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판단결과를 보면 2015년도도 경우 전국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1만1406건이 종결(96.4%)되었고 이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423건이고 그중 66건만이 법원 패소하여 84.4%가 재심을 유지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판단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시장의 복잡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은 개인도 억울하지만 이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공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노동위원회가 함께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제부 220-0663 (FAX 222-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